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 α ... 당정, 28일 최종안 확정

다음달 5일 총리 시정 연설·18일 처리 목표... 손실보상안 논의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 추가 방안 검토... 심사 과정 증액 가능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 5000억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로.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

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제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나 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 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심사에 속도를 내 3월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손실보 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은 3월 안 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 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고위 당정협 의회에서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실보상법 제출 시기와 관련해 "거의 다 (준비가) 됐 다"며 "28일 공개 고위 당정협 의회에서 같이 (발 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정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 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등 안

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법안을 근거로 하 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 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하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지원 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 대통령, 부산 가덕도 공항 예정지 시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여 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선거 앞 정치적 사건 수사 안할 것" 박지원 "국정원 사찰공개 '정치'로 끌어들이 유감"

공수처장 관혼토론회...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 조류이자 대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향후 공수처가 전·현직 대통령의 비위 등 정치 적 사건을 수사할 때 받을 외압과 관련, "무슨 일 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열린 관혼토론회에서 '윤석 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 는 지적에 "전반 진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양쪽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평하 게 들으며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십수년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 벌어진 반 대 시위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목소 리를 경청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수사 개입 가능성 에 대해 "화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호 사건' 선정과 관련해 "중립성을 의 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뒤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들을 생각도 있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도 최대한 피하

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공수처는 연간 수사를 3 ~4건 할 수 있을 것'이란 언급과 관련해서는 "특검 과 같은 대형 사건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며 "저희 가 대형 사건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 조직에 대해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시대 적인 조류이자 대세"라며 "공수처가 판·검사 등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수사부와 공 소부를 분리해 브레이크(제동)를 걸게 하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 쳤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 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는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중으로, A라고 할 수는 없지만, B~C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불거진 보수 정부 당시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 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25일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보수 정부 당시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달 초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 원 전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 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포함해 과거 국 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 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그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런 정치권 의 상황은 "국정원의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삼석,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원금 1위

평균 1억7560만원...민주, 351억원 국민의힘에 두배 이상 많아

지난해 총선 정국과 맞물려 국회의원 후원금 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 명 국회의원의 평균은 1억7559만7856원이었으 며 이중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3억300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1억3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모금액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 당이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는 등 진보에 쏠림 현 상이 두드러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0년 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300명의 후원회 모금 액은 538억24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354억1765만원)보다 51.9% 늘어난 수치다. 1 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7942만원이었다.

국회의원총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경 우 평균 후원금 모금 한도액(1억5000만원)이 2 배인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20대 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경우는 3 억원, 21대에 국회에 들어온 경우는 1억5000만 원 한도다.

광주지역은 윤영덕(동남갑) 1억5100만원, 이 병훈(동남을) 1억5000만원, 송갑석(서구갑) 2

억9800만원, 양향자(서구을) 1억5400만원, 조 오섭(북구갑) 1억5000만원, 이형석(북구을) 1 억4800만원, 이홍민(광산갑) 1억5000만원, 민 형배(광산을) 1억5200만원이었다.

전남지역은 김원익(목포) 1억5000만원, 김희 재(여수을) 1억4900만원, 소병철(순천광양곡 성구례갑) 1억4700만원, 서동용(순천광양곡성 구례) 1억5500만원, 신정훈(나주화순) 1억 7100만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2억9900 만원,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1억4400만 원, 윤재갑(해남안도진도) 1억5000만원이었다.

정당별 국회의원 후원회 총 모금액은 민주당 (174명)이 350억75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산, 102명) 은 156억3762만원을 모았고, 정의당(6명)은 11억1300만원을 모았다. 이밖에 열린민주당 (3명) 3억7434만원, 국민의당(3명) 1억9000만 원이다. 소속의원이 각 1명인 시대전환과 기본소 득당은 각각 7878만원, 6371만원을 모금했다.

의원별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억188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이 2072만원으로 모금액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형석,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 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은 25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 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현행 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 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장협의회 간의 연합협의회를 설립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 중 직 장협의회 활동은 직장협 의회와 해당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고, 협의 사항에 대해 기관장 의 이행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협 의회가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 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결정권한이 상급 기 관에 있으면 협의내용 이행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충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